

“지속적인 법 위반과 안전 경시의 결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고소, 고발 진행

✎ 전승우 기자 (경기도본부) | ⓒ 승인 2024.07.10 16:17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책임 묻기 위해 협의회, 대책위 51명이 에스코넥·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 등 5명 고소, 고발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오늘 오전 11시,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와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인 박순관, 아리셀 본부장 박중언, 메이셀 대표이사, 성명 불상의 아리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감독자 등을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고발한다고 알렸다.

고소, 고발 요지 설명에 나선 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이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발언을 통해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아리셀 등 회사와 그 경영진의 지속적인 법 위반과 안전 경시의 결과라고 확신한다”며 주식회사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총괄본부장 박중언, 아리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모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코넥, 그리고 파견노동자를 공급한 주식회사 메이셀을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어 피고소인·고발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설명한 뒤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관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 △과거 화재 사고 이후 개선 조치 여부 확인 △리튬 1차 전지 취급 관련 안전 규정 준수 여부, 소화설비의 적절성 및 비상구 설치·관리 실태, 안전보건교육의 실질적 이행 여부 및 내용의 적절성, 화학물질 관리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파견·도급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책임 이행 실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적절성 검토 △외국인 노동자 안전 조치 실태 철저히 조사 등 경찰과 고용노동부에게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협의회와 대책위는 유가족 47명을 고소인으로, 대책위 공동대표 4명을 고발인으로 해 피고소인·고발인들을 화성서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 고발했다.

한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아리셀 사무실 등 3개 장소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관계자 2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승우 기자 (경기도본부) ecjunid@naver.com